[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유학 목표가 뚜렷한 학생일수록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생 유치 정책 방향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직속 국제교육협력기관으로 1977년 설립한 재외동포 교육기관(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이 모태다. 1992년부터 국제교육협력기관으로 확대·개편됐고 △유학생 유치 지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교육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 원장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 유학 공식 포털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도 "학과·전공별로 졸업 후 어떤 진로로 진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2023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만 프로젝트)을 통해 제시한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를 올해 달성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7000명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시점(2027년)을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대학들은 한국에 유학 온 목표가 뚜렷한 학생일수록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적다고 입을 모은다. 학업·진로 계획을 수립한 뒤 한국 유학을 오는 학생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국이 유학하기 좋은 나라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학과·전공별로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로 진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우리 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 유학 공식 포털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 인 코리아·Study in Korea)도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 ·학과 정보 제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전

공별 취업·진로 경로를 제공하는 데에 방점을 둘 생각이다.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입국한 다음 날 잠적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유학 오기 전부터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한국과 본국 간의 임금 격차 때문으로 이런 학생들의 입국 경로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학위를 따기 위해 병행하는 아르바이트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졸업 후 한국에 남아 취업하더라도 재학 중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면 주당 취업 허용 시간도 늘려주고 있다.

-교육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에 맞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이공계 석·박사 인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외국인 유학생 중 본국 귀국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딴 외국인 학생 10명 중 6명은 본국행을 선택한다는 통계도 있다. 다만 대학에서 전문 지식과 연구 역량을 쌓은 뒤 귀국하는 것과 기술 유출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연구개발(R&D)은 보안이 강화돼 있어서다. 한국 학생들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연구과제도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 유출이나 불법체류 등 여러 부작용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들은 연구·교육 역량에 비해 국제화 지표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 외국인 교원이나 유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교수·학생이 대학에 공존해야 교육·연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유학생 1명을 유치할 때마다 1617만원의 경제효과(2022년 단국대 정책연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등록금·생활비·체재비용 등을 지출하기 때문인데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불법체류나 기술유출 문제는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체류, 졸업 이후까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함께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29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출제를 포함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AI를 활용해 문제은행(출제할 문제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체계적으로 저장해 두고, 주제·난이도·정답률 등에 따라 문제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통해 토픽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의미다. 토픽은 말하기 평가까지 포함해 연간 15회 시행하기에 출제해야 할 문항 수가 많다. 출제위원들이 각자 만든 문항을 검토하고, 전체 시험에서 주제·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토픽은 1997년부터 시행돼 올해까지 약 29년간 시험이 시행됐는데 그간 출제된 기출 문제를 AI에게 학습시켜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AI를 통해 지문·문항을 생성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토픽 시험이 지난 29년간 시행되면서 문제 풀이 능력만 키워 시험 보는 응시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맞는 말이다. 토픽은 2027년이면 시행 30년을 맞는다. 그간의 출제 유형을 익혀 문제 풀이 능력을 키우면 점수는 올라가지만, 그것이 실제 한국어 실력을 완벽히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토픽에 여러 차례 응시하면서 공부한 사람은 출제 방식에 익숙하다. 이 때문에 AI를 활용해 문제은행을 구축해 출제 가능한 문제를 다양화하려 하고 있다. 지금도 문제은행은 구축돼 있지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고 문제은행은 보완적으로만 활용하는데 앞으로 문제은행 중심의 출제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토픽 응시자가 2017년 약 29만명에서 올해 6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응시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한국 유학 수요다. 둘째는 취업·결혼 등 비자 발급과 관련된 수요다. 셋째는 유학·취업 계획과 관계없이 개인적 흥미로 한국어를 배우고 실력을 확인하려는 수요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토픽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당시 연 6회 시행에 그쳤던 토픽 시험을 2025년부터 연 12회로 확대한 점도 응시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토픽 시행 국가도 같은 기간 70개국에서 94개국으로 확대했다. 향후 토픽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응시 수요가 100명도 안 되는 국가에 별도의 시험장·감독관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2029년부터 '토픽 홈테스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첫해에는 공인 성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한국어능력을 자체 평가해 보는 시험으로 운영하지만 2030년부터는 '토플 홈에디션'처럼 공간적 제약 없이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고 성적까지 인정받게 할 계획이다.

한상신 원장은…

△1968년 서울 △서울 영락고 △서울대 미학과 △일본 사이타마대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 협동과정 기술정책전공 박사 수료 △행정고시 37회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과장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 비서실장 △전북대 사무국장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경상북도 교육개혁지원관 △국립국제교육원장